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문창진 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1. 한국의 고령화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0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3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9.1%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13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이르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령사회에의 도달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24년)보다도 6년이나 더 빠른 추세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8%(02년)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초고속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라는 두 가지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보건의료기술과 영양 및 위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결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인구의 증가, 여성

의 경제활동 증대 및 자녀양육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은 2003년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으로 떨어져 '역(逆)피라미드' 형의 인구구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전반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인구학적으로 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 고령사회 정책추진 기본방향

고령사회정책은 인구정책, 저출산대책, 소득보장, 건강보장 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산업, 금융, 재정, 교육, 주택, 여가 등을 포괄한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방향의 정립이 시급하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하여 빈곤선상의 노인과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공적소득보장체제로 편입하고, 노인고용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노후소득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급증하는 노인의 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셋째, 신체적 변화에 맞는 노년생활 도모를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스스로가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노년생활양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노인문화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한다.

넷째, 고령인구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복지 수혜자이면서도 소비주체 세력으로 등장할 향후 노령층을 소비의 주체로 파악하면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3. 고령사회 대책기반 구축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05.5.18일 공포, '05.9.1일 시행)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구정책과 출산, 일자리와 소득보장, 건강과 요양보장, 고용정책과 노인인력, 평생교육, 여가 및 문화,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의 장관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범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4.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가.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제도 조기정착 도모

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여 나갈 것이다. 보험료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함은 물론, 상시 투명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촌 연금 보험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 농어촌 주민이 확실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 경로연금 확대 추진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1933. 7. 1 이전에 출생한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월 3.5~5만원) 지급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급대상 연령이 65세로 낮추어질 경우 지급대상자는 63만 2천명에서 20만8천명이 증가한 8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들에게 알맞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이 경륜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고령자 우선채용을 권장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까지 노인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제공을 목표로 2005년

에는 3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 노인자산소득 증대

이외에도 60세 이상 노인의 3천만원 이하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역모기지론 등 개인적 노후소득 보장수단 마련을 위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및 인프라 구축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준비

65세이상 노인의 14.8%가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동 제도는 비용부담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치매·중풍 등 최종증 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초기의 보험료수준을 최소화하며,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중복을 방지하고, 가족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및 그룹 홈 등을 활성화하여 요양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고, 지방재정력이 약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한시적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나갈 것이다.

금년 7월에 동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보장 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간병인력 등 노인요양전문인력 양성제도를 마련하여 나갈 것이다.

□ 노인요양보장제도 안정적 시행기반 확보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10만 9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1,543개소의 시설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료시설 위주에서 서민층이 이용하는 실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매년 실비시설을 50~70개소씩 설치하여 나갈 것이다.

가정에 있는 노인을 위하여 금년 중 농어촌 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대폭 확충(56개소)하고, 노인간병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가족간호휴가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노인의 심신상태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다. 노인욕구에 맞는 생활문화 활성화

□ 노인 주거보장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노인주택 공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주택 건설 등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주거시설의 장애제거 및 안전을 위한 필요기준 등을 체계화하여 나갈 것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 건축시 건립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 추진하며,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거주편의를 위한 개보수비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소유 노인의 '주택담보부 주택개량자금 융자서비스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며, 실비·유료 노인복지주택 등 서민·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실버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기획특집

□ 복합노인복지타운 조성

또한 농어촌지역에 주거를 기본으로 의료와 보
호, 여가와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실버타운(복합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
해 나갈 것이다. 금년 중 4개 권역(강원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농특예산 140억원)하여 그 결과('05~'06년)를
토대로 단계별 확대 추진을 검토하여 나갈 것이
다.(기초시설은 정부가 지원, 수익창출 시설은 민간
참여 유도)

□ 지역사회 노인문화 활성화

지역사회내 노인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교
육·취업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확충을 추
진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생활체육협의
회, 주민자치센터 등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
인교실, 학교 등에서 노인들이 건강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능력·경력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여 세대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 나가
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자원봉사 교통편
의 및 장비제공, 활동비 지급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라. 고령친화산업의 지원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05년 27조원, '10년 41조
원으로 추정된다.

재산과 소득 능력이 있는 노령층을 소비와 경제
의 주체로 파악하면서 고령친화적(高齡親和的) 산업
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고령친화적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고,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을 하며, 실버용구·용
품·기기에 대한 투자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중 가칭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